

# ‘AI 신뢰성 실증’ 지역 거점 도약 탄력

### 전주시, 전국 최초 실증사업 기관 최종 선정... 전북형 검·인증 모델로 전국 확산 기반 마련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JICA)이 지역 AI 신뢰성 체계의 새 전환점이 될 ‘AI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전주는 중앙에 집중됐던 AI 검·인증 역량을 지역으로 이식하는 대표적인 실증 사례이자, 전국 14개 SW품질역량센터를 잇는 ‘AI 신뢰성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

JICA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협약 체결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향후 4개년 500억 원 규모의 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첫 단계이다. 사업비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역 기업들의 법적·기술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투

입된다.

JICA는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신뢰성 실증 전반을 주도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지역 확산 기반 조성 전략 수립 △AI 신뢰성 향상 및 확보 컨설팅 협력 △AI 신뢰성 실증 인프라(센터) 구축 △AI 신뢰성 인식제고 및 우수 성과 확산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JICA는 TTA와 함께 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지역 내에서 AI 기술 기업이 고난도의 AI 신뢰성 실증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역 AI 신뢰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TTA는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서 AI 신뢰성 분야의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AI 신뢰성 향상 및 확보 컨설팅, 검·인증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품질 검증 등을 수행해 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양 기관은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모빌리티·기계 부품, 에너지, 제조, 퍼지컬AI, ICT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AI 신뢰성 검·인증을 집중 지원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이 AI 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역 특화형 AI 신뢰성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 확산 기반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JICA는 사업을 통해 정책적·산업적·지역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정책적으로는 AI 기본법과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실증모델을 마련하고, 산업적으로는 지역 기업의 AI 품질 경쟁력과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지역적으로는 AI 신뢰성 실증센터와 검증 인프라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인력 수요 확대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허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AI 기본법 시행 원년에 전북이 대한민국 AI 신뢰성 실증의 지역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TTA의 검·인증 역량과 JICA의 25년 지역 밀착 운영 경험을 결합해 전북에서 검증된 AI 신뢰성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ICA는 오는 6월 지식산업센터 내에 ‘AI 신뢰성 혁신 실증센터’를 개소하고, GPU 서버 등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 모집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6일 저염·저당 도시락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시락의 맛과 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특별 시식회’를 개최했다.

## 전주시, 맞춤형 영양 복지 나선다

###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 저염·저당 도시락 제공

전주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염도와 당분은 낮추고, 영양은 다한 ‘저염·저당 도시락’을 제공기로 하는 등 노인·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영양터지기 사업’을 한 단계 강화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 저염·저당 도시락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시락의 맛과 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특별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와 주민센터 통합돌봄 담당 및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컨설팅과 지원사업 매칭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현장소통을 통해 단기간인 애로 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농식품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까지 면담 내용을 취합해 해당기업에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만든 음식을 직접 시식하며 △식단 구성의 적절성 △음식의 맛과 양 △용기 및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와 관련 이 사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영양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저염·저당 도시락은 통합돌봄대상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제공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비용의 20%, 일반 대상자는 100%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청구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농식품기업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 전주농기센터, 애로사항 전수 조사·현장중심 실태 파악 나서

전주시가 지역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소통 행정’에 나섰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2026년 농식품기업 현장소통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일부터 오는 6월까지 1차로 전주지역 94개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유선 상담과 현장방문을 병행한 맞춤형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적도 담고 있다.

1차 소통 대상은 전주시 소재 농식품기업 130개사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94개사로, 시 농식품산업과 직원들이 6개 조의 전담반으로 나뉘어 기업별 전담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조는 기업의 특성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담당 기업을 배정받고, 유선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과 경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현장소통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매출·고용 등 기업 현황 파악 △전주산 원료농산물 사용 실태 조사 △인력·자금·판로·기술 등 애로사항 발굴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시는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건

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기업에 안내하고,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및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컨설팅과 지원사업 매칭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현장소통을 통해 단기간인 애로 해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농식품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까지 면담 내용을 취합해 해당기업에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7일 자원순환교육의 일환으로 일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 전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본격화

전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 준비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 손라성과의 협약 체결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실제 운영을 위한 실행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베트남 손라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근로자 선발·교육·송

출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전주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제 도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 검토해 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농가 수요 기반 도입 규모 설정 △근로자 배치 및 관리체계 구축 △수소 및 생활여건 점검 △비자 및 출입국 절차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통합돌봄 힐링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식)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진북동 도토리골과 팔복동 신복마을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 노인들을 위해 케이크인 바구니 만들기 및 식품 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주시 노인복지과와 협력해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 참여한 통합돌봄 대상 노인

들은 원에 치료와 노래 교실을 통해 직접 케이크인 바구니를 만들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식품 꾸러미를 통합돌봄 대상자와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하며 감정을 나눴다.

김형식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전국화 사업의 첫 시작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미래 꿈나무 대상 자원순환 현장교육 실시

전주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미래의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형 자원순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7일 자원순환교육의 일환으로 일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해 환경의 중요

성을 배우는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전주시 광역소각자원센터와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매립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